

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('22. ~ '24.) 기본계획 시안

2021. 12.

교 육 부

■ ■ 목 차 ■ ■

I. 추진배경	1
II. '19~'21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..	3
III. '22~'24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	5
IV. 세부추진계획(안)	8
V.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	17
VI. 향후일정	21

I. 추진배경

1

고등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

□ 신산업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의 능동적 대응 필요

- 디지털산업의 발전과 저탄소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추세에서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양성 시급
 - 특히, 전문대학은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소·중견기업의 신산업 적용·확산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여 그 중요성 증대
- 초고령사회 전환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우수한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적극적 노력 필요
 - ※ 인적자본 축적이 노동생산성 증가율('01년~'18년)에 기여한 정도는 30%에 달하며,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해 교육의 질적 향상에 꾸준한 관심 필요 (한국은행, '20.)

□ 청년 취·창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시급

-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·창업에 요구되는 능력이 다양해지는 현 상황에서 재학 중 다양한 취·창업 역량배양 필요
- 특히,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고등교육 및 일자리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 재학생의 취·창업 내실화 시급
 - ※ 코로나19 실업영향에 따른 우울증상 척도를 조사한 결과 2·3년제 전문대 재학·졸업자의 우울정도가 25.0으로 높게 나타남(경사노위, '21.2.)

□ 대학의 자율성 기반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 긴요

- 각 전문대학의 위치, 학과구성, 인근산업 분포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기반을 둔 자율적인 혁신 필요
- '19~'21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다양한 혁신 성과를 토대로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강화 필요

□ 전문대학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위기 가속화

-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'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입학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가능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추세
 - '21년 등록 기준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.4%(총 40,586명 미충원), 전문대 충원율은 84.4%로 상대적으로 전문대 미충원 심각
 - ※ '21년 신입생 충원율 : 수도권 일반대(99.2%) > 비수도권 일반대(92.2%) > 수도권 전문대(86.6%) > 비수도권 전문대(82.7%)
- 전문대 충원율 하락은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위축, 전문기술인재 부족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하 등 야기

□ 전문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한계

- 수년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전문대학 재정여건이 열악*해지면서, 교육환경개선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혁신에 한계 노정
 - * 등록금이 주 자원인 교비회계의 비중(약 80.5%)이 매우 높은 반면, 산학 협력단회계(약 11.4%), 법인회계(약 8.1%) 비중 순
- 특히,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변화를 반영한 기자재 활용 등 교육혁신이 시급하나 재정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가중

□ 고등직업교육 내실화에 대한 사회각계의 요구 증대

-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수립 등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추세
 - ※ 기업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업환경 전망 및 대응 관련, 향후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인력 부족(20.6%)을 응답 ('21.11. 대한상의)
- 특히, 대학내부의 혁신을 통한 교육과정 내실화,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함께 대학 외부 변화요인에 대한 능동적 반영 요구

Ⅱ. '19~'21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

1

주요성과

□ 전문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기반 조성

- (자율적 혁신) 각 대학의 인재상 등을 반영해 수립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근거, 사업계획을 수립·운영하여 자율적 혁신 강화
 - 특히, 사업계획의 수립, 사업추진, 사업비 집행* 등 사업전반에서 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사업의 효과 제고
- *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지침을 Negative방식으로 개정('21.7.) 하여 각 대학의 책임 하에 지출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
- (정량적·정성적 성과 제고) 대학별 발전 전략에 따른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투자를 지원하여,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·확산
- ※ '19~'21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'19년 72.9%로 사업 미참여대학(65.5%) 대비 7.4%p 높은 수준

□ 대·내외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기반 강화

- (교수학습 지원 강화)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및 교수학습법 개발·적용 등을 통해 우수 전문기술인재 성장 지원
- (산업변화 대응) 신산업 등 산업변화를 반영한 교과·비교과 교육 과정 운영으로 산업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
 - 산업변화를 반영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각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자재 구축으로 교육 현장성 제고
- (코로나19 대응)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본격화에 따라 인프라 확충, 교육과정 개발·활용, 수업 보완방안 마련 등 기여
- ※ (사례) LMS와 실시간 화상강의 플랫폼을 일원화하여 수업운영관리 체계화, 실시간 화상강의 녹화 및 학생대상 상시 콘텐츠 보급 등

□ 전문기술인재의 취·창업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확대

- (진로·취업 지원)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산업현장에 투입,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 및 산업발전에 기여
 -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졸업 후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
- (고등직업교육 세계화) 전문대 졸업생들이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전반의 과정 지원

2

보완 필요사항

□ 전문대학 혁신을 위한 중·장기 방향성 확립

- (방향성 정립)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발전전략에 맞춰 고등직업교육 변화 요구를 반영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필요
 - ※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,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등
- (체질개선) 학령인구 감소 등 대외적 환경 및 각 대학의 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규모화 등을 통해 고등직업교육 질적 혁신 필요·확산

□ 대학 대·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직업교육 기반 공고화

- (미래교육 변화 대응)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 및 인프라가 미래 교육 전환 및 교육과정 혁신의 기제가 되도록 대학별 전략 필요
- (취·창업 지원 강화)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장기화, 산업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진로 및 취·창업 지원 강화방안 내실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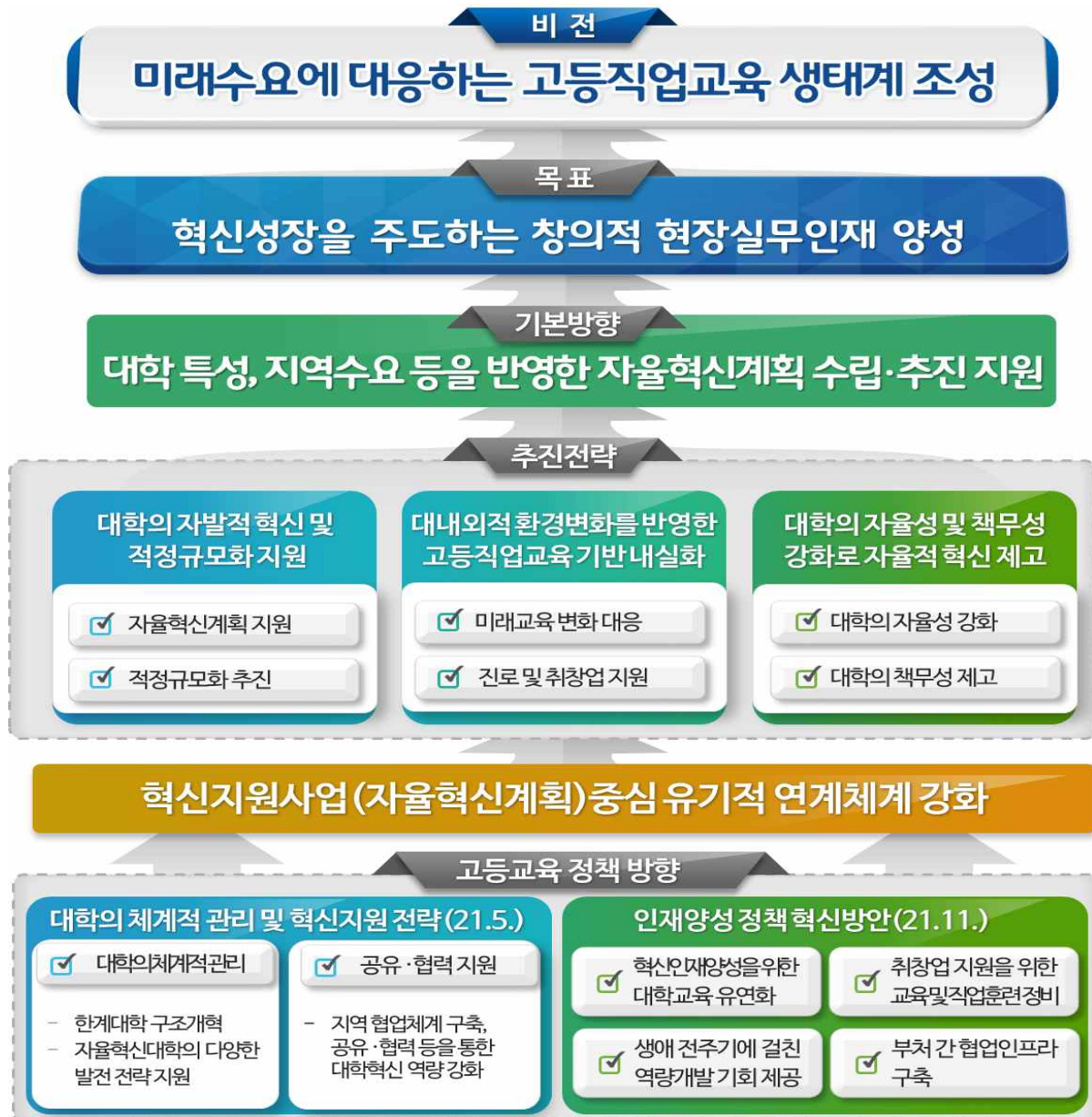
□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

- (자율성 확대) 사업계획 수립·추진 전반에 걸친 자율성의 지속 확대로 혁신성과 제고 도모 필요
- (책무성 강화) 대학의 사업성과 도출 노력에 대한 지원강화로 자율혁신계획의 성과 확산과 국고 지원 책무성 강화 필요

Ⅲ. '22 ~ '24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

1

사업 기본방향



- ❖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대두되는 산업환경의 변화, 학령인구의 감소 등 전문대학 대·내외적 여건을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혁신 필요
- ❖ 특히, 기존의 전통적인 고등직업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와의 연계,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절실
- ☞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토대로 **고등직업교육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 추진**

- ❖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한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, 학생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확대로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 기반 마련

1. 대학의 자발적 혁신 및 적정규모화 지원

- (자율혁신계획 지원) 각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고, 이를 통한 성과 제고
 - 대학 혁신과정에서 자체재원 투입현황 및 각종 재정지원사업 간 역할분담, 성과분석 등을 토대로 혁신지원사업의 운영방향 설정
 - ※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외 교육부 타 재정지원사업, 타부처 재정지원사업 추진상황 분석을 토대로 대학혁신을 위한 역할분담계획 마련
 - 혁신지원사업의 성과가 인근대학·지역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
- (적정규모화 추진)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대학의 자발적 적정 규모화 및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으로 고등교육 적정규모화 지원
 - 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, 대학의 적정 규모화 노력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대학의 노력 뒷받침
 - ※ '21년도 미충원 규모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('23~'25년)을 수립한 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 지급
 - 학생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되, 그 결과에 따라 컨설팅 제공 및 사업비 지원
 - ※ 대학별 선제적 적정규모화 계획의 규모가 큰 권역은 해당 사항을 유지 충원율 점검에 따른 적정규모화 권고에 적극 반영

2. 대·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기반 내실화

- (미래교육 변화 대응)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해 축적된 각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을 집약하여 미래교육 전환 대응전략 마련
 - ※ 플립드러닝, 블랜디드러닝 등 대면·원격 수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 목표 달성 및 수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- (진로 및 취·창업 지원)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장기화로 취·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생에 특화된 진로 및 취·창업 지원 확대
 - 전문대학생에 특화된 각종 진로지도 프로그램,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등 학생의 재학 중 진로탐색 지원 강화
 - 대학의 대·내외적 여건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에 특화된 취·창업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 효과적인 취·창업 지원 모색

3.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로 자율적 혁신 제고

- (대학의 자율성 강화) 각 대학에서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사업 운영상의 자율성 확대
 - 종전 네거티브 방식의 사업비 집행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적 사업추진 지원
 - ※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실험실습 역량 제고를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
 - 재정운용 계획·실적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에 대한 추가적인 자율성 부여 등을 검토
 - ※ 대학별 재정투자계획 및 실적 검토 등을 토대로 우수대학은 2차년도 이후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 추가 부여 등 검토
 - (대학의 책무성 제고) 대학의 공공성·투명성을 뒷받침하고, 세분화된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연계로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무성 제고
 - 대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·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 제도·규정을 확립하고,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
 - 대학혁신위원회(총장 및 교무위원급)를 통해 자율혁신계획에 기반한 대학 내 제반 재정지원사업의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체계 마련
 - 각 대학의 성과에 대해 세분화된 평가를 추진*하고, 이를 사업비 (인센티브)와 연계하여 우수성과 도출을 위한 대학의 노력 지원
- * ('19~'21년) 3개 등급(가중치 1.5~0) → ('22~'24년) 5개 등급(가중치 2.0~0)으로 세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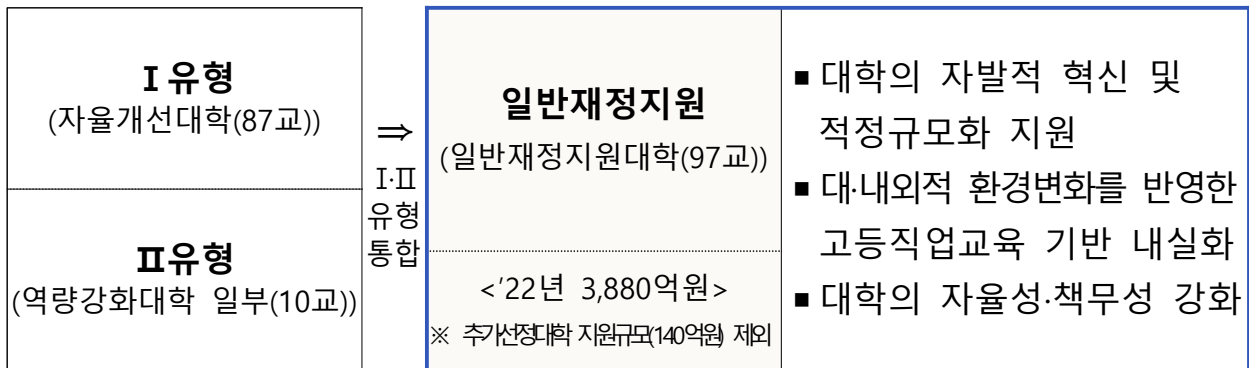
IV. 세부추진계획(안)

1

사업추진개요 및 절차

< '19~'21년 >

< '22~'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>



※ II유형(후진학선도형)은 별도 사업으로 분리

2

자율혁신계획 수립방향

□ 자율혁신계획 수립개요 및 활용

- (기본방향) 각 대학의 대·내외적 여건과 역량 등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각 대학에 특화된 자율혁신계획 수립·추진
- (대상) 일반재정지원대학 97교 ※ 자율혁신계획 미제출 시 지원 불가
- (주요내용) 대학별 중·장기 발전전략과 구성원 의사소통을 토대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, 이와 연계한 적정규모화 계획 마련
- (활용) 자율혁신계획을 토대로 각 대학은 사업을 추진하고, 연차·종합평가 시 추진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·환류
 -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각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인센티브와 연계('23~'24년)
 - 적정규모화 계획('23~'25.) 우수대학에는 '21년 미충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('22년)

< 자율혁신계획 내 주요 포함 사항(안) >

I. (대학의 중·장기 발전전략)

- 대학 대·내외 여건 진단에 따른 중장기 발전전략* 수립·제시
 - *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,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
- 대학별 중장기 발전 전략에 근거한 특성화 계획

II. (적정규모화 계획)

-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근거한 적정 규모화 계획 마련
(최근 충원현황 및 향후 충원을 추세 자체 진단 포함)
- '23~'25년 적정규모화 방향 제시
 - ※ 정원감축, 학부-대학원 정원조정(전문기술석사), 모집유보,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운영 등

III. (혁신전략 및 재정투자계획)

1. (교육·산학협력·기타 혁신)

- (교육혁신)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교육과정·환경·방법, 교육의 질 관리 체계, 교수학습 지원체계, 취·창업 지원, 학생지원, 교육 시스템 구축 등
 - ※ (필수) 학생 취창업 지원 및 진로지원 관련 계획을 반드시 수립·추진
- (산학협력혁신)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, 기업연계 교육 등
- (기타혁신)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, 지역사회 연계·협력 기반 지역특화 인재양성, 대학 운영 공공성, 회계 투명성 확보 등

2. (사회적가치 실현) 대학운영 전반의 사회적가치 실현계획

3. (공유·협력 강화) 대학 간 교육과정, 교원, 시설 등 인적·물적 자원의 공유 등 인근대학·지역과의 공유·협력 모델 제시 및 이에 따른 파급효과 도출방안

4. (재정투자계획)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성 분석 등을 토대로 향후 혁신지원사업의 재정투자계획 제시

IV. (사업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)

- 대학혁신위원회 및 대학혁신운영위원회 구축·운영방향 제시
- 중장기 발전전략의 달성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및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
 - ※ 교육부 포함 정부부처,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확보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, 대학 내 거버넌스를 통한 총괄 체계 구축 현황·계획을 제시
- 중장기 발전전략-자율혁신계획-성과관리의 일관성 및 연계성 등

□ 대학 내 사업총괄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강화

- (기본방향)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,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사업운영방향 설정 및 환류
 - 사업추진을 위해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평가체계, 조직 등의 구성·운영 등을 통해 대학의 사업성과 확산 기반 마련
- (추진체계) 각 대학의 자율혁신계획을 중심으로 대학 자체투입재원, 추진 중인 재정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성과 고도화
 - ※ 대학혁신위원회·대학혁신운영위원회 기능을 대학 내 구축하되, 대학 규모 및 재정지원사업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혁신위원회로 통합 운영 가능
 - (대학혁신위원회) 대학 자체투입재원, 중앙정부·지자체 재정지원 사업 운영의 총괄적 점검 및 자율혁신계획의 달성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유기적 관리 추진
 - ※ 대학의 투명성·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회계 모니터링 등 포함
 - ※ 총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, 주요 사업의 사업단장 및 학생대표 등 재학생 포함
 - 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, 성과관리, 규정(지침)마련 등 사업관리
 - ※ 사업추진과 관련된 교무위원급, 학무위원급(예시: 기획처장)으로 구성하되, 외부 전문가, 재학생을 반드시 포함
 - ※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사업비 관리를 위한 사업비관리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
- (활용) 성과평가 시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이행을 위한 각종 재정 지원사업 추진체계 간 유기적 연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
 - 내실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·운영 정도,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혁신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 간 연계정도 등 고려

❖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('22.5.)한 **적정규모화 계획***, 권역 내 대학의 **충원을 현황** 등을 고려하여 **권역별 기준충원을 설정**

- * ①정원감축, ②대학원(전문기술석사) 전환, ③모집유보, ④성인학습자 전환 등
- ☞ 권역 내 대학의 선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적정규모화 권고에 적극 반영
- ☞ 점검결과에 따라 컨설팅('22년) 및 적정규모화 권고('23년) 실시

○ (대상대학) 일반재정지원대학 97개교

* 5대 권역별(수도권, 대구경북권, 부산울산경남권, 충청강원권, 호남제주권) 점검

○ (유지충원을 기준) 점검년도 및 직전년도의 신입생충원율, 재학생충원율로 구성

▶ **대학별 유지충원율** = $0.6 * (\text{점검년도 및 직전년도 신입생충원율 평균}) + 0.4 * (\text{점검년도 및 직전년도 재학생충원율 평균})$

※ ('22년 점검) '21년·'22년 2개년도 평균 / ('23년 점검) '22년·'23년 2개년도 평균

※ $\text{신입생충원율}(\%) = [\text{정원내입학자(명)} / \text{정원내모집인원(명)}] * 100$

$\text{재학생충원율}(\%) = [(\text{정원내재학생수} / (\text{정원내학생정원} - \text{학생모집정지인원(명)}))] * 100$

※ 대학별 선제적 적정규모화 계획의 규모가 큰 권역은 해당 사항을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른 적정규모화 권고에 적극 반영

○ (결과활용) 점검 결과에 따라 권역별 하위 30~50% 수준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적정규모화 권고

- ('22년) 점검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적정규모화 컨설팅 실시

- ('23년) 대학 교육의 질 및 대학 운영상의 본질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권역별 자발적 노력을 감안하여 적정규모화를 권고하고, 점검결과를 '24년 재정 계속지원과 연계

※ '23년 점검에 따른 적정규모화 권고 미이행시 '24년(3차년도) 사업비 지원 중단

※ 소규모 대학(입학정원 400명 미만)이 권역별 기준충원율 미충족 시 적정규모화 권고 또는 사업비 감액 조치 중 선택 가능

4

사업비 배분 및 활용

1. '22년도 사업비 배분(안)

'22년도 사업비 배분 구조 (사업관리비 30억원 제외)

포물러 사업비 (3,450억원)	포물러 사업비(3,450억원)		
	기준경비	규모지수	교육여건
	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	√재학생 수	재학생총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
+			
적정규모화 지원금 (400억원)	적정규모화 계획 지원금(400억원)		
	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상 적정규모화 계획('23~'25) 수립 규모		

□ 포물러 사업비 (3,450억원)

- (권역별 배분) 3,450억원을 권역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'재학생 수(50%)'와 '학교 수(50%)'를 고려하여 배분
- (대학별 배분) 대학별 기준경비, 규모지수,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물러 100%로 배분

※ 권역별 예산 규모에 맞추어 대학별 포물러 금액(기준경비*규모지수*교육여건) 배분

【 사업비 배분(안) 】

포물러 사업비				+	적정 규모화 지원금	-	사업비 조정	=	대학별 지원액
기준경비		규모지수							
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	×	√재학생수	×						

▶ 재학생 수, 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 배분

▶ 정원의 선발비율, 타사업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

【 포물러 사업비 구성요소 세부 내용 】

구 분		내 용
기본 배분 지표	기준경비	■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근거에 따른 전국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※ '20년 결산 기준 총 교육비 / '20년 기준 총 재학생
	규모지수	■ 학부 재학생 수의 제공근
	교육여건	■ 재학생 충원율, 전임교원 확보율,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(평균1, 표준편차0.4)한 각 변환점수 합으로 교육여건 점수 산출 $\text{지표별 변환점수} = 1 + \left(\frac{\text{지표별 점수값} - \text{지표별 평균값}}{\text{지표별 표준편차}} \times 0.4 \right)$ ※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 0.2점, 최고점 1.8점으로 설정(±2표준편차) ※ 교육여건 점수 = 재학생 충원율 변환점수 + 전임교원 확보율 변환점수 + 교육비 환원율 변환점수
	비 고	■ 권역별 예산 규모에 맞추어 대학별 포물러 금액 (기준경비×규모지수×교육여건) 조정

□ 적정규모화 지원금 (400억원)

❖ '21년 미충원 인원(정원 내) 대비 우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지원하여 대학의 노력 뒷받침

- (지원대상)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일반재정지원대학 97교
- (지원조건) '21년 미충원(정원내) 규모 대비 90% 이상의 '23~'25년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
- (지원규모) 400억 원
 - ※ 각 대학의 적정규모화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지원규모 조정 가능 (지원규모 감액 시 포물러 사업비로 전환)
 - (선제적 감축 지원금) '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 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금 지급(240억 원) (단, 1교당 최대 총 24억 원)
 - (미충원분 감축 지원금) '21년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 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금 지급(160억 원)

▶ **적정규모화 계획('23~'25) 인정(불인정) 기준**

인정 (부분인정)	1. 정원감축(100%) 2. 전문학사 1명 감축, 전문기술석사 1명 증원 시 50%인정 (3년 이상 유지) 3. 입학정원 모집유보 인원의 50% (3년 이상 유지) 4. 정원을 성인학습자 등 학령인구 외 정원 전담과정으로 전환한 경우 50% 인정 (3년 이상 유지) ※ '①정원감축'은 '22년도 선제적 정원감축분부터 인정(타 기준은 '23년 실적부터 인정)
불인정	1. 보건의료 정원 배정 등을 위한 정원감축 미인정 2. 행정처분 및 법정 의무에 따른 정원감축 미인정 3. 학제개편(2년제↔3·4년제) 후 편제정원을 유지하면서 입학정원은 줄어드는 경우 감축 미인정,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증원 미인정

※ 유지충원을 점검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이행실적에서도 위 기준을 준용하되, 대학원(전문기술석사)·모집유보·성인학습자 정원 부분 인정 범위는 변동 가능

- **(지원내용)** 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('23~'25년)에 따른 환산 감축 정원에 비례하여 권역 구분 없이 배분

【 적정규모화 정도에 따른 환산 감축정원 】

적정규모화 계획('23~'25년) 상 총 감축규모 (=선제적 감축+미충원분 감축)

↙	↘
선제적 감축 지원금(240억원)	미충원분 감축 지원금(160억원)
신입생 충원이 원활한 대학은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가중하여 지원 ※ 구체적 가중치는 권역별 의견수렴 후 확정	미충원분 감축 규모에 따라 배분

※ 신입생 충원율(%) = [정원내입학자(명) / 정원내모집인원(명)] * 100

- **(이행점검)** 성과평가('23, '24년) 시 자율혁신계획 상의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, 미이행 시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 등 조치
- **(실적인정)** 자율혁신계획 상 선제적 적정규모화 노력분은 '23년 유지충원을 점검에 따른 적정규모화 권고 이행실적으로 인정

□ **사업비 조정**

- **(정원외 선발)** 정원 외 선발비율 기준(119%*)을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 확보율 미충족 시 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감액

* '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'이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은 114%

※ 기회균형선발(11%), 재외국민(2%),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(비수도권, 5%) 등 법정선발비율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

$$\text{※ 정원 외 선발비율(\%)} = \frac{(\text{정원 내·외 총 선발 인원} - \text{장애인, 탈북자, 계약학과, 전문대졸이상자, 외국인 온라인과정})}{\text{모집 정원}} \times 100$$

※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(20%) 제외

- (감액규모) 대학별 협약액 * [(정원 외 선발비율(%)-119) / 119]

※ (수도권) 대학별 협약액 * [(정원 외 선발비율(%)-114) / 114]

- (타 사업 집행률) '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사업' 대학별 배정예산 중 미집행예산, '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한시지원사업*' 미집행분 감액 ('21.9.28., '21.11.15. 기 안내)

* 대학별 배정인원 중 미참여인원 x 70만원 감액

※ 정원외 선발비율, 타 사업 집행률 등에 연동되는 사업비 조정액은 사업 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 대학 추가 지원에 활용

2. '23~'24년도 사업비 배분(안)

※ 세부 내용은 연도별 기본계획에서 확정

【 사업비 배분(안) 】

포물러 사업비			+	성과평가 인센티브	-	사업비 조정	=	대학별 지원액
기준경비	규모지수	교육여건						
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	× (재학생수) ^{1/2}	× 재학생 총원을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을						

▶ 재학생 수·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 배분

▶ 정원외 선발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

- (포물러 사업비) 해당년도 사업비의 약 70% 내외를 포물러로 지급
- (성과평가 인센티브) 해당년도 사업비의 약 30% 내외를 해당년도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지급

- 평가 결과 권역 내 대학을 5등급(A, B, C, D, E)로 구분하고, E등급을 제외한 대학에 등급별 가중치*에 따라 인센티브 배분

* 등급별 대학 비율(안) : A(20%), B(20%), C(20%), D(20%), E(20%)

등급별 배분 가중치(안) : (A) 2.0, (B) 1.6, (C) 1.3, (D) 1.0 (단, E등급은 미지급)

- (사업비 조정) 유지충원을 점검결과 및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

3. 사업비 활용

- (사업비 집행) 대학은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관계법령, 사업비 집행 지침*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비 집행

* '19~'21년 혁신지원사업 대비 사업비 집행불가항목을 축소하여 자율적 집행 지원

< 집행 불가 항목 비교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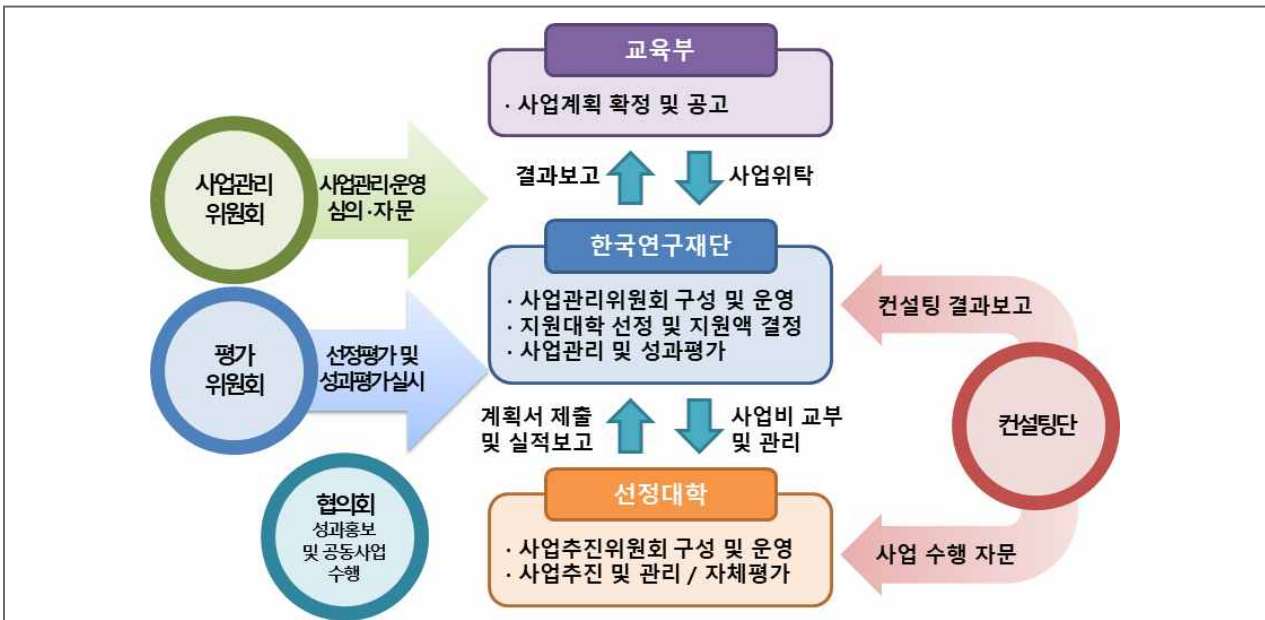
비목	'19~'21년 사업	'22~'24년 사업
인건비	-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, 성과급 및 사업관리운영 수당 등	-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(단, 기존 교직원 대상 성과급 및 사업관리운영 수당은 사업비 총액의 3% 범위 내에서 집행)
장학금	- 입학 전 신입생·휴학생·졸업생·졸업 유예생 직접 지원금 -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지원금 -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	- 입학 전 신입생·휴학생 직접 지원금 - 자율혁신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개인지원금 -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
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	-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 - 기존교재 원고료 지급 등 중복 이중 지원경비 -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직접 지원금(현금 물품)	- 자율혁신계획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 - 기존교재 원고료 지급 등 중복 이중 지원경비 -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직접 지원금(현금 물품)
교육·연구 환경개선비	- 건물 신축·개축·증축 및 토지매입 경비 ※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※ 교육·연구 환경개선비는 총 사업비의 40% 이내, 연간 사업비의 50% 이내에서 지출	
실험·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	- 교원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 기자재 구입비	- 자율혁신계획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 기자재 구입비
기타 사업운영경비	-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 - 사업과 무관한 대학홍보비 및 행사비,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-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-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- 학원수강료 및 외국어시험 응시료	

※ 단, 중대한 회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의 경우 집행 기준 강화 검토

V.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

1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

□ 추진체계도



□ 사업주체별 역할

- (교육부) 사업 기본계획 수립·공고 등 사업 총괄
- (한국연구재단) 사업 관리·운영 위탁에 따른 사업 수행
 -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,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·관리, 대학 선정 및 성과평가 시행, 성과분석 및 컨설팅 등 수행
- (사업관리위원회)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자문,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액 확정, 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
- (각 대학) 사업계획 수립, 학사제도 개선, 교육과정 개발·운영 등 사업추진 및 실적보고
- (협의회) 사업 발전방안 및 연계·협력 방안 논의, 성과 확산·홍보
 - ※ 사업 선정대학, 산업체 인사,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·운영

□ 사업수행 주체

- 사업수행 대학은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의 장과 사업추진 협약 체결
 - 각 대학의 사업수행계획,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, 의무 이행사항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, 사업비 등 포함
- 대학은 총장직속 '대학혁신위원회'와 '대학혁신운영위원회'를 구성하고 타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, 혁신사업계획 수립, 세부 지침 마련,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, 사업 추진 모니터링, 성과관리 등 수행

□ 사업비 편성 및 집행

- 지원금은 대학에 총액(Block Grant)으로 교부하며, 대학은 교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 관리
 - ※ 사업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부서 설치 또는 지정
-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되, 교육부 및 전문기관에서 규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·집행
- 사업수행 대학은 협약 체결 후 사업비 교부 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,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자체재원으로 선 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
-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 투자가 불가하며,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 내 점검체계 구축

□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

- ① 사업 목적 외 사용, ② 횡령 등 부당 집행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,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
 - ※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

- '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·관리 매뉴얼'에 따라, ①**법령 위반**
②**입시·학사·회계비리 등 부정·비리사안** 등에 대한 **사업비 관리·조정**
* 「고등교육법」, 「공교육정상화법」, 「사립학교법」, 「국립대학회계법」 등
- **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**(교육부)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의 부정·비리 발생 시 **수혜 제한**(사업비 감액 등) 조치
※ 부정·비리의 정도 및 수혜제한 기준 등은 '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·관리 매뉴얼'에 따름(추후 개정 시 개정 매뉴얼에 따름)
※ 대학의 부정·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타 대학 추가 지원 등 활용
- 성과지표 등과 연관된 **대학정보공시 지표값의 오류**(단순 오류, 허위 등)가 발견되는 경우, **사업관리위원회** 심의를 통해 수정된 지표값의 성질 및 정도에 따라 **지원금 조정** 또는 **지원 중단** 조치 가능
-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**지원금 삭감**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 소요 비용은 대학 자체 부담
- 공사, 용역 및 물품의 제조·구매 계약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원칙으로 사업비 절감 및 국고지원금 집행 투명성 확보

□ **유지충원을 점검에 따른 재정 계속지원**

- '23년 유지충원을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정규모화를 권고하고, 점검 결과를 '24년 재정 계속지원과 연계

□ **정산 및 결과 보고**

- 국고지원금은 사업시작년도의 차년도 2월말까지 집행 완료가 원칙이며, 10%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승인 하에 이월 가능
※ 단, 적정규모화 지원금 수혜 대학은 '22년도 사업비 이월범위 조정 예정
- 사업 종료 시 사업 전 기간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실적 보고서(사업비 집행 내역 포함) 제출
- 국고집행 책무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은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

□ 성과관리 추진계획

- (컨설팅 실시) 자율혁신계획의 타당성,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 컨설팅
 - 각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·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정·보완 추진
 - ※ 계획서 내용이 매우 부실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결과에 따른 수정·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,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 수정 시까지 지원금 교부 시기 조정 등 검토
 - ※ 컨설팅 주요내용(안) : ①사업목표와 중·장기 발전계획, ②혁신전략(사업 추진체계, 사업추진 주요내용 등), ③재정집행계획(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포함), ④성과관리 계획(성과지표 등 포함) 등
- (성과지표 및 평가) 성과지표는 전문대학 혁신 및 기본역량과 관련된 대학 공통의 핵심 성과지표와 대학별 자율지표로 구분
 - ※ 핵심 성과지표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, 연차·종합평가 등과 관련한 정량(핵심 성과지표 포함)·정성평가 내용과 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 예정

【 성과지표(안) 】

구 분	지 표
핵심 성과지표	재학생 충원율, 전임교원 확보율, 교육비 환원율, 총 강좌 수, 취업률
자율 성과지표*	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근거, 핵심성과지표 이외의 지표를 자율 선정

- * 대학별 자율지표 개수는 5개 이내로 제한하되, 대학의 사업 추진 내용과 연계한 핵심 사항이 포함되도록 지표 작성
- 대학의 현재값(2021년 기준)을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목표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목표 달성 여부 등 확인
- 성과지표에 따른 이행 중심으로 연차·종합평가 등 성과지향적 평가를 실시하되,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비 연계를 확대하여 성과관리 강화 및 대학의 책무성 제고

□ 성과평가 추진계획

- (평가시기) 2·3차년도에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고, 사업 종료 전 사업기간동안 주요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
 - ※ 사업 3차년도에는 3년간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로 연차평가를 대체
- (평가내용) 자율혁신계획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적정규모화 계획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※ 각 대학이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 미이행 시에는 평가등급 조정 등 가능하며, '22년 적정규모화 지원금 수혜대학은 해당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 등 조치
 - ※ 연차평가 지표(안) (구체적인 지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 예정)

- ▶ 혁신전략에 따른 실적 (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 등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실적 등)
- ▶ 책무성·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 및 실적
- ▶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정도
- ▶ 공유·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성과
- ▶ 성과관리 및 대학특성화 전략에 근거한 재정집행의 적절성
- ▶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(성과관리 조직 등의 우수성, 구성원 참여정도 등)
- ▶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 정도
- ▶ 차년도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

- (결과활용) 매년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'23, '24년도 사업비의 일부(사업비의 약 30% 내외)를 인센티브로 지급

□ 성과공유 및 확산

- 사업계획서, 우수사례 등을 대학, 전문기관 및 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, 워크숍·포럼 등을 통해 공유·확산 추진

VI. 향후일정(안)

※ 추진 과정에서 변경 가능

- 기본계획 시안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확정('22.2.)
- 대학별 협약체결('22.3.) 및 자율혁신계획(적정규모화계획 포함) 제출('22.5.)
 - ※ 각 대학은 협약체결('22.3.) 시 자율혁신계획 요약본(안) 제출

- 용어의 정의, 인정기준 등은 2021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, 고등교육 통계조사지침서를 준용하되, 일부 상이한 부분은 아래 각 지표별 내용에 기재

지 표	산 식
재 학생 충원율	$\frac{\text{정원 내 재학생 수(명)}}{\text{학생정원(명)} - \text{학생 모집정지 인원(명)}} \times 100$ <p>※ 학생정원 : 모집단위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(대학정보공시 지침서 4-라-1 학생정원 작성지침 준용)</p> <p>※ 학생모집정지인원 :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</p> <p>※ 재학생 충원율이 100% 초과 시에는 100%로 환산</p> <p>▶ 기준 :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</p> <p>▶ 공시항목 : 4-라-1. 재학생 충원율</p>
전임교원 확보율	$\text{전임교원 확보율} \times 60\% + \text{교원 확보율} \times 40\%$ $\text{① 전임교원 확보율} = \frac{\text{전임교원 수(명)}}{\text{교원 법정정원(명)}} \times 100$ <p>※ 전임교원 확보율 : 학생정원 기준과 재학생 기준 중 작은 수</p> <p>▶ 기준 :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</p> <p>▶ 공시항목 : 6-나.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</p> $\text{② 교원 확보율} = \frac{\text{전임교원 수(명)} + \text{겸임/초빙교원 인정인원의 합}}{\text{교원 법정정원(명)}} \times 100$ <p>※ 겸임/초빙교원 인정인원의 합 : ‘교원 법정정원의 1/2(소수점 이하는 버림)’과 ‘겸임 및 초빙 교원 환산인원의 합’ 중 작은 값</p> <p>※ 겸임/초빙교원 환산인원 : 각 교원별 인정시수의 계열별 합계 ÷ 9시간</p> <p>※ 교원 법정 정원 : 학생정원 기준 교원 법정정원</p> <p>※ 교원확보율 100% 초과 시에는 100%로 환산</p> <p>▶ 기준 :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자료</p> <p>▶ 공시항목 : 6-나.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</p> <p>고등교육통계 교원 현황</p>
교육비 환원율	$\frac{\text{총 교육비(천원)}}{\text{등록금 수입총액(천원)}} \times 100$ <p>※ 국·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누어 표준화</p> <p>1) 총 교육비</p> <p>- 국·공립 : 대학회계(일반·법인회계 포함) + 발전기금회계 + 산학협력단 회계 + 도서구입비 + 기계기구매입비(최근 3년 평균)</p> <p>※ 국·공립대학 산학협력단회계결산 기준 : 2016년 산학협력단 회계기준 일자 변경(교육부고시 제2016-88호)에 따름</p> <p>- 사립대 : 교비회계 + 산학협력단회계 + 도서구입비 + 기계기구매입비(최근 3년 평균)</p> <p>2) 등록금 수입총액 : ‘등록금 수입 총액’ 항목을 활용함</p> <p>▶ 기준 : 각 회계연도 결산</p> <p>▶ 공시항목</p> <p>- 교육비 : 국·공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-나-1.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, 사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-나-2.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활용</p> <p>- 등록금 수입액 : 12-다-1. 장학금 수혜현황의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항목의 등록금 수입 총액</p>